

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

* (예산) ['19] 669억원 집행 → ['20] 예산 2조1,632억원 (8,893억원 집행, 7월 22일 기준)
(사업체수) ['19] 1,514개소 지급 → ['20] 7.6만개소 신고(7월 22일 기준)

-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.
- 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전담 창구(대구 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, ☎ 053-667-6014)에 신고하면 되며
 -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.
-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(www.ei.go.kr)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,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.
 - 또한,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*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.

*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(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)

<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>

- ❖ 'ㄱ' 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 → 지원금 지급제한,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(추가징수) 조치
- ❖ 'ㄴ'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(페이백) → 지원금 지급제한,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(추가징수) 조치

□ 한편,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.

○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*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

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(단,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
○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.(8.28.시행)

□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(9~10월 예정)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* 부정수급 점검 기간 중 적발시 부정수급 환수, 지급제한 및 제재 부가금 부과

벌칙

자진신고 서식

사업장명		대표자명	
소재지		전화번호 (휴대폰)	
고용보험관리번호		사업자등록번호	
부정수급 내용			
자진신고 사유			
부정수급액 반환 예정일			
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자진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
2020년 월 일			
신고자 :			(서명 또는 인)